

# '아동 성착취물 제작' 징역 최대 29년

###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발표

#### 앞으로 '처벌불원'도 형량결정 때 고려

#### '전과유무' 엄격 판단... '공탁금' 감경 안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양형 기준이 발표된 가운데, '박사' 조주빈(25)에게도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조주빈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어 이번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법원이 강화된 기준을 참고해 형량을 정할 수 있다.

사실상 'n번방 사태'로 양형기준 강화 논의가 촉발된 만큼, 조주빈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도 새 양형기준을 무

시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04차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거나 같은 범죄를 여러 건 저지르면 최대 징역 29년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가 내놓은 기준은 아동·청소년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다른 범죄보다도 높은 편이다. 미성년자를 강간했을 경우에는 기본 형량이 최대 8년이며, 가중처벌의 경우에는 최대 9년이다. 반면 이번에 권고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경우 기본 형량이 최대 9년이며, 가중처벌 때는 최대 13년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형이 감경될 수 있는 사유도 줄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가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일이 빈번한데, 이러한 '처벌불원'은 특별감경인자로 취급돼 형량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양형위는 이를 일반감경인자로 낮춰,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할 하도록 했다.

양형위 운영 규정에 따르면 양형기준은 그 효력이 발생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번엔 미뤄진 양형기준은 오는 12월 최종 의결될 예정이어서, 조주빈 등 사건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고려한다면 조주빈 등에게도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 2009년 미성년자 강간 사건에서, 양형기준이 발표되기 전 기소됐어도 법원이 이를 참고해 형을 정하는 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즉 조주빈 등에게 강화된 양형기준을 적용할지 말지는 담당 재판부의 재량인 셈이다. 재판부가 새 양형기준을 참고한다면 조주빈에게도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다. /뉴스시스

### 도내 기초의회 의정 소식



####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

#### 현장의정활동 벌여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일주 의원)가 15일 덕진구 팔복동에서 추진 중인 매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및 서곡광장에서 추진대교간 도로개설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매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덕진구 팔복동2가 94-4번지 일원의 상습 침수피해를 예방을 위해 2015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총 171억원이 투입되어 2021년 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은 집중호우 시 전주천 수위 상승으로 홍수위보다 낮은 매화지구의 침수피해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의 홍수피해를 예방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원활한 공사 추진과 부실공사 여부를 점검해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전주시 북부권과 서남권을 연결하는 가로망 확충으로 출퇴근시간 교통 체증 가중화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 중인 서곡광장에서 추천대교간 도로개설 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상황을 청취 후 시민불편사항 등을 점검했다.

김일주 위원장은 "시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공직관리는 물론 안전사고 방지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시민의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사업현장은 1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농업분야 조세감면제 일관성 있어야'

### 도의회, 김철수 의원 발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오늘 의결키로

전북도의회가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가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부 규정을 폐지하는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인은 배제하기로 했다. 게다가 농업법인에 대한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항목은 감면을 연장하지 않고 올해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농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액이 90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농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정부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지닌 농업·농촌의 유지·발전을 위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산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행 농업분야 조세감면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이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부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김철수 도의원은 "저성장 고령화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을 살리기 위해 귀농, 귀촌, 청년 창업 등 신규 농업 인력이 농업 생산 기반인 농지와 주거기반을 확보하는데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해 영농 진입 초기에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16일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해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 /유호상 기자



####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가 15일 군산산업단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 왼쪽)이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사서교사 없는 학교도서관은 '빈 껍데기'"

### 이병도 도의원, '확충 촉구 건의안' 발의... 오늘 본회의 처리

전북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3)이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서교사 확충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 배치는 임의조항으로 규정돼 있어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데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2018년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을 통해 사서교사 배치가 의무조항으로 바뀌었지만 학교현장의 현실은 법률 개정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도내 학교들도 전체적으로 사서교사 법정소요는 총 773명이지만 실제 배치는 82명에 불과해 배치율이 10.6%에 머물고 있다.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서교사와 같은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한 입법 조치가 사실상 학교현장에서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건의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교육부는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계획에서 2030년까지 학교도서관 수 대비 약 50%의 사서교사를 충원한다고 밝혔지만 교육부의 이행의지가 불투명하고 50% 수준으로 충원해도 부족한 건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면서 "교육공간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보다 공격적인 인력 충원에 나서도록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는 16일 제3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병도 의원(전주3)이 대표 발의한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서교사 확충 촉구 건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국제규범으로 평가받는 국제도서관연맹의 학교도서관선언(1999년)에 의하면 학교도서관은 지식정보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기초가 되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이어야 하며 학교도서관이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각종 형태의 정보매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습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 "지방소멸 대응해야"

### 오평근 도의원,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발의... 오늘 본회의 처리

전북도의회 오평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2)이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구를 계속해서 흡수했고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전북도도 예외는 아닌데 한때 200만명 이상의 도민들의 거주했지만 20여년의 기간 동안 20만명 이상의 인구가 감소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놓여있다.

또한 지난 10년 사이 취업과 교육 등을 이유로 청년 8만여 명이 전북을 떠나 지역의 활력은 떨어지고 인구가 급감하면서 지역경제 악화,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소멸위험에 이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오평근 의원은 "도내 전체 읍면, 동 243곳 중 191곳, 즉 78.6%가 소멸위기에 처한 쇠퇴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전북도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적 위기기로 확산될 지방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소멸위기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16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 최영심 도의원, 가짜뉴스 근절 법적 기준 마련 촉구

#### 근절 법적 기준 마련 촉구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은 15일 '가짜뉴스 생산 방지와 최초 생산자 처벌 규정 강화 및 관련 법안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를 정한 법률이 없다 보니 처벌이 어려워 가짜뉴스가 범람해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며 이에 법률 제정과 국가 차원의 대안 마련 요구가 주요 골자다.

이번 건의안은 16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를 거쳐 청와대와 국회, 문체부, 방통위 등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 도의회 예결특위 추경예산안 의결

### 전북도 9조1752억원

### 교육청 5608억원 임의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 고청2)는 15일 전북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9조1,752억원(수정예산 20억 증액 포함)과 도 교육청의 2회 추가경정예산안 3조 5,608억원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도가 제출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증액된 3,353억원(수정예산 포함)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 지난 1, 2회 추경 이후 코로나19의 지속적 피해에 따른 추가 보완 지원사업 등에 편성했다.

도 교육청은 기정예산 대비 1,039억원이 감소한 추경예산안을 편성, 이는 정부 3차 추경 등으로 중앙정부 이전 수입 감소 등에 따라 재원을 조정한 것이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학교방역대책 및 온라인 수업 지원 등 긴급한 현안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최근 집중호우까지 겹쳐 도민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

서 피해를 겪고 있는 도민의 생계안정 및 신속한 복구, 도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이같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만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지역경제, 특히 특별재난지역 등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도 자체 예산 편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 재원 마련을 위해 삭감된 학력성장 및 교육복지분야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 "수해피해 주민들이

#### 안심하고 생활했으면"

#### 도내 시군의회의장들

#### 폭우피해지역에 위문품 전달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동화 전주시의회의장)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남원시와 완주군 등 8개 시·군에 쌀과 밥상 등 생필품 4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15일 수해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등을 방문, 주민들을 위로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위문품은 전주시의회를 비롯한 전라북도 14개 시·군의회를 대표하는 의장협의회에서 수해 복구와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마련했으며, 피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사전에 조사해서 전달했다.

강동화 협의회장은 "코로나에 이어 수해까지 겹치며 지칠대로 지친 피해 주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위문품을 마련했다"며 "하루빨리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져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